전통과 현대 1998 가을호

표지의 제명은 목판본『명의록언해(明義錄諺解)』에서 집자(集字)한 것이다. 『명의록』은 1777(정조 1)년에 정조의 명에 의해 간행된 책으로, 영조 말년에 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했던 인물을 처벌하고 정조를 옹위했던 인물들의 충절을 밝히기 위해 편찬되었다. 『명의록언해』는 한자로 된 『명의록』을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집자 김문식

기획특집

한국 민간신앙의 저력

토착 민간신앙과 불교의 힘겨루기 김석근 · · · · · · 16
급진사상으로서의 미륵신앙 전경옥 · · · · · · 58
굿의 사회학 유승무 · · · · · · 76
산업사회의 무당 조성윤 · · · · · · 94
토정비결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김중순 · · · · · · 114
한국 기독교와 기복신앙 노치준 · · · · · · 134

좌담

한국의 민간신앙, 왜 강한가?

김인회, 주강현, 최준식, 장현근 · · · · · · 170

시사논단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정치학과 인식론 함재봉 · · · · · · 200
'유교 자본주의'와 IMF 개입 유석춘 · · · · · · 240

논 점 한국의 자유주의

학술대회 참관기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가능한가? 이한우 · · · · · · 280
인터뷰 "저는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 부릅니다" 복거일 · · · · · · 289
칼럼 자유와 평등의 갈림길 김학은 · · · · · · 297

외국인 학자와의 대담

한국학과 동양학의 과거, 현재, 미래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교수 · 258

학술모임탐방

'문헌과해석'-우리의 옛 문헌 자료를 공부하는 모임
이종묵 · · · · · · 300

서평

어떤 포스트모더니스트의 공자 독해
이승환 · · · · · · 308

신진논단

18세기 한 선비의 의식세계로의 낯선여행
김태은 · · · · · · 328

포토에세이

한국의 민간신앙

글, 사진: 김수남 · · · · · · 154

편집자의 말 · 10
다음호 안내 · 152
지난호 안내 · 348
정기구독 안내 · 350

표지디자인 심효식

'유교 자본주의'와 IMF 개입[1)]

유 석 춘

현재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955년 생. 81년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86년 미국 일리노이대학 사회학 박사. 한국사회학회 총무, 한국동남아학회 총무 역임. 〈연세춘추〉편집인.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 『발전과 저발전의 비교사회학』, 『동남아시아의 사회계층』, 「유교 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등 논저 다수

1.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온 나라가 침통해 하고 있다. 국민들은 IMF의 개입을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과 같은 국치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은 이런 분위기를 앞장서 확산시켜 왔다. 하기야 미국의 조정을 받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앞으로 3년간의 경제정책을 미주알 고주알 협의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경제주권을 빼앗겼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가을부터 기자들이 전해 온 우리 정부와 IMF간의 협상과정 또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기는 마찬가지였다. 우선 우리 국민은 김영삼 정부가 숨기려 했던 국가의 부도위기 정보를 IMF측의 공개에 의해 알게 되었다. 구제금융에 관한 실무진의 협상결과를 양측의 최고책임자가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수모를 당하였다. 캉드쉬 총재의 의중은 비상소집된 한국 정부의 국무회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며, 급기야는 대선 후보들마저 양측의 양해각서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

온 나라가 '세계화'를 한다고 법석을 떨더니 결국 한 일이란 우리 나라의 국무회의를 국제통화기금의 총재 밑으로 편입시킨 일 뿐이었다. 그 결과 대선 후보들은 집권을 해 보기도 전에 운신의 폭을 저당 잡혀야 했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국민들은 돈 떼이고 실직 당할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다.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이 지경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경제적 성공을 평가할 때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요소를 한 가지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나라가 매우 능률적인 경제관료 집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Johnson, 1985). 경제발전에 필요한 일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관료가 제공한 역할은 다른 어느 국가와 비교하여도 독보적인 것이었다. 이들이 한편으로는 '시장경제를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산업을 보호'하였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경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고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장경제 유지'와 '국내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적 목표는 '수출주도산업화'라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결집되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하나하나 제공되면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경제관료는 이 전략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과 결정을 도맡아 처리하였다. 그래서 경제적 동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관치금융'이라는 금융정책 그리고 '재벌육성'이라는 산업정책은 모두 수출을 위한 관료집단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OECD 가입을 위한 샴페인을 터뜨려도 좋을 정도의 성공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우리 경제관료 집단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서 국내외의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였다. 국내적으로 재벌은 이미 육성의 대상으로 남아 있지 않았다. 정부가 육성하지 않아도 이들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온갖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공룡화를 시도하고 있었다(Kim, 1997). 그런 재벌을 과거와 같은 특혜금융으로 뒷받침해 줄 까닭이 없었다. 재벌 스스로도 오히려 정부가 방해만 하지 말아 달라는 형국이었다.[2] 국제적으로도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출발한 WTO 체제는 국내산업에 대한 특혜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기업을 붙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재정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다.

과거와 같은 경제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3] 그러나 경제관료는 이러한 요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앙은행의 손발을 잘라내고 재경원을 키우는 일에 매진하였다.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시점에서도 우리 경제관료는 재벌의 '배째라' 식 요구에 끌려 다니기만 하였다. '경쟁력' 보다는 '애국심' 에 호소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는 자세 자체가 WTO 체제라는 시대의 조건과는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었다.[4]

그런 의미에서 이번 IMF의 구제금융 조건은 우리 경제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재벌에 끌려 다니고 노조에 끌려 다니며 앞뒤가 맞지 않는 경제정책을 수시로 발표해 온 우리의 경제관료는 이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치러야 한다. 시대의 흐름과 국내외의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적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관료집단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물론 관료 자신의 변신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정치권의 변신이다. '챙기는 관료' 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치권의 지도력이 절실하다. 이도 저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정치권을 개방하여 '구조조정' 을 해야 할 판이다.

2. IMF 개입의 원인

30년을 넘게 성장하던 우리 경제가 왜 갑자기 지난 겨울을 기점으로 거꾸러지게 되었는가? 국내외의 의견이 분분하다(한국정치연구회, 1998). 우선 가장 설득력 있다는 외국 전문가의 고견을 한 번 들어보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MIT 대학의 크루그만 교수이다(Krugman, 1994). 그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의 성장이 구사회주의권의 경제와 같이 생산에 필요한 요소의 투입을 동원을 통해 확대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일찍이 예언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작년에 드디어 성장을 멈추어 버렸고, 이에 따라 크루그만 교수는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경제는 과거 사회주의권의 경제가 보여 주던 문제점 즉 강제적 동원에 의한 '무기력' 을 전혀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행위자들에게 이윤추구의 동기부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공산당의 계획과 집행이 있을 뿐이다. 이 체제에서는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일할 까닭이 없고, 따라서 경제는 활력을 가질 수 없다. 여기까지는 나도 크루그만 교수의 견해에 백퍼센트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한국이 구사회주의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부분이다. 나는 크루그만 교수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고 싶다. 당장 서울에 와서 남대문 시장을 한 번 둘러보라는 권유이다. 그곳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장사꾼들이 손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눈물겨운 경쟁을 하는 모습을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상점과 같이 손님이 와도 쳐다보지도 않는 종업원은 남대문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니 나는 크루그만 교수의 견해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크루그만 교수는 그것은 매우 제한된 현상이고 보다 중요한 산업부분에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를 꺾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우리 나라 산업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온 재벌 기업간의 경쟁이 결코 남대문시장에 존재하는 경쟁의 수준에 비해 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재벌은 서로 경쟁하여 왔다. 경

쟁사와 비교하여 실적이 떨어지는 재벌기업의 사장자리는 파리 목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러니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혁신이 없고 따라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한국의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이야기일 뿐이다.

물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재벌은 다른 한편으로 국가와의 결탁을 도모하며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혜의 대가로 검은 돈이 오갔을 수 있다. 한보 등의 사건이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우리 나라에만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경쟁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도 정치권과 기업의 밀착이 검은 돈을 매개로 진행되다가 발각되어 청문회를 여는 등의 법석을 떠는 일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니 한국의 국가는 특별히 더 부패하고 미국의 국가는 특별히 더 깨끗하다는 주장에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5]

문제의 핵심은 우리 국가의 관리 능력이다. 국민소득 만불이 되는 선진국 문턱에서 우리 국가는 방심했다. 춥고 배고픈 시절 어떻게 하면 경제를 일으켜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를 불철주야로 고민하던 국가가 소위 말하는 성공에 취해 90년대 새로운 국제경제의 질서 아래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 경제적 성장과 함께 공룡화되고 있던 재벌의 활동을 제대로 감독하고 통제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다. 탐욕의 화신인 재벌이 무제한의 경쟁을 벌이며 사적 이익을 추구할 때, 우리 국가는 이를 길들여 국민경제가 무제한의 국제경쟁에서 버텨 나갈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 정부가 나서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을 퇴출시키며 재벌을 길들이고 있음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3. 아시아적 가치논쟁

'아시아적 가치'에 관한 논쟁이 한창이다(김영희, 1998).[6] IMF 이전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부각되더니, IMF 이후에는 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논쟁의 초점은 서구와 대비되는 가치체계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경제적 성공 여부라는 현실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아시아 경제가 성장할 때는 아시아적 가치의 유용성이 주목을 받았고, 최근 아시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부터는 아시아적 가치의 문제점이 집중적인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비되는 유럽적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근대 서구의 발전을 가져 온 유럽의 가치체계를 이르는 말이다. 가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서구의 질서를 밑에서부터 부정하며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 개신교 분파의 가치체계가 유럽을 중세로부터 근대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개신교의 가치체계가 근대 유럽의 가치체계로 자리잡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첫째는 우선 종교로부터 정치가 분리되는 과정이었다. 세속적인 문제를 다루는 국가가 성스러운 문제를 다루는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는 한 중세 유럽의 질곡은 깨어질 수 없었다.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되어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등장한 유럽의 절대주의 국가는 바로 종교로부터 분리된 국가의 탄생을 확인해 주는 역사적 과정이었다(Anderson, 1974).

둘째는 이렇게 탄생한 국가로부터 다시 경제가 분리되는 과정이었다. 재분배의 과정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국가의 통제로부터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 한 서구에서 산업혁명과 같은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의 가치체계는 자유방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유럽의 시장을 국가로부터 독립시키는 작업에 성공했다. 시장의 주역이었던 부르조아 계급이 귀족의 절대주의 국가를 무너뜨리며 경제적 이익의 자유로운 추구를 지배적인 가치로 등장시킨 것이 바로 유럽의 역사인 것이다(Polanyi, 1957).

이러한 두 단계의 분리과정을 거치면서 유럽은 기독교 개신교 분파의 가치를 지배적인 가치로 수용하게 되었다. 근검절약을 전제로 절대자와의 고독한 만남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개신교의 가르침은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배경으로 근대 서구에서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정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Weber, 1958[1930]).

그렇다면 아시아적 가치는 과연 어떠한 사회적 및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자라온 것인가? 아시아적 가치는 물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어쩌면 비유럽적 가치는 모두 아시아적 가치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중동의 무슬림에서부터 인도의 힌두교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불교는 모두 넓은 의미의 아시아적 가치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관심의 주된 대상은 물론 동아시아의 유교적 가치체계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역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유럽 역사와는 엄청난 차별성을 보여 준다. 우선 유교는 처음부터 세속적인 종교이었기 때문에 국가를 종교로부터 분리할 여지가 없었다. 예수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전개된 유교의 가르침은 개인의 구원이라는 성스러운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처음부터 유교는 국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치체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 진행되었던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두 번째의 과정도 동아시아에는 전혀 나타날 여지가 없었다. 유교적 가치체계에서 생산이 정치적 재분배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생각은 국가의 올바른 역할을 포기하는 일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Hall & Ames, 1987; Tu, 1996).

이러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아시아적 가치에 관한 논쟁은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족이나 공동체의 중요성 혹은 혈연, 지연, 학연의 기능과 역기능은 모두 사회의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짜임새와 연관될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 축적을 사상한 채 현실의 부침에 편승하는 아시아적 가치에 관한 논쟁은 지양되어야 한다.

4. 경제위기와 가족자살

우리는 흔히 자살을 극단적인 개인적 불행의 결과로 이해한다. 소외되고 좌절한 삶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대안이 자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자살이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의 현상이라고 밝힌 사회학자가 있다. 불란서 혁명기의 혼란한 사회를 분석한 뒤르껭이다(Durkheim, 1951[1930]).

뒤르껭은 자살이 사회적 통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였다. 사회적 통합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과 집단이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따르는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에 의해 결정되는 개념이다. 혼란한 사회는 통합의 정도가 낮고, 안정된 사회는 통합의 정도가 높다.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뒤르껭은 사회적 통합의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통합이 강한 사회는 '이타적' 자살이, 그리고 통합이 약한 사회는 '이기적' 자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기적 자살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살이다. 남아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상관하지 않는다. 뒤르껭은 이러한 자살이 '무규범'의 상태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서로 다른 가치와 규범이 혼재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헷갈리고, 방황과 고민 끝에 죽어 버리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생각을 한다. 반면에 이타적 자살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경우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 열사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자살에 해당한다. 집합적인 가치가 개인의 선택을 지배하는 '초규범'의 상황에서 이타적 자살은 자주 발생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가족의 집단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빈번히 목격하고 있다. IMF 시대가 초래한 비극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다. 40대 가장의 실직을 계기로 아내는 물론 어린 자녀까지 동반하여 죽음을 선택하였다는 보도는 온 국민을 숙연케 한다. 또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아이들을 보육원에 버리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들기는 마찬가지다.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무규범 상태가 초래한 비극이다.

분명 뒤르껭의 분석은 IMF 시대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설득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가족의 자살에 관한 의문을 모두 해명해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왜 한국의 무규범 상황에서는 '자살의 단위'

가 개인이 아니고 가족으로 나타나는가? 이 질문은 역시 우리 사회의 역사적 발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

서양의 근대화는 가족이나 이웃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관계로부터 개인을 분리해 내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요약한 표현이 바로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혹은 '일차집단에서 이차집단으로'와 같은 말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개인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전통사회의 이념인 유교는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가족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교적 인간관계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근대화 경험에도 불구하고 전혀 약화되지 않았다(고병익, 1996; 함재봉, 1998; Helgesen, 1998).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중심으로 급속히 세계시장에 편입한 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 나라의 경제는 여전히 '재벌'이라는 가족중심적 기업조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기업의 중요한 직책을 맡을 때 우리는 지금도 친인척이 신원보증을 하도록 한다. 한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도 우리는 가족이 대부분 보증을 선다. 우리는 이렇게 발전하여 왔다. 가족주의는 한국식 발전모델의 사회적 기반이었고 원동력이었다. IMF가 초래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사회현상에서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의 강력한 기초를 읽을 수 있다.

5. 한국의 유교적 가치

부유한 딸의 집에 살던 병들은 아버지와 가난한 남동생 가족은 딸(누이)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월세도 낼 수 없어 딸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는다. 딸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급기야 재산권의 행사를 법에 호소한다. 1심과 2심은 딸의 손을 들어준다. 그러나 대법원은 딸의 재산권은 인정하지만 그것의 행사는 인륜을 저버린 행위이므로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되돌려 보낸다.

1998년 6월 12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언론은 다음날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였다. 왜 그랬을까? 비정한 딸의 재산권 행사보다는 병든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인륜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배타적 재산권에 기초한 개인주의적 삶을 우리 사회는 아직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아직' 수용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서구화'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소위 '근대화'가 한국에서 시작된 지 이미 100년이 훨씬 넘었다. 1876년의 강제된 개항 이후 한국은 끊임없이 근대화를 추구하여 왔다. 그 결과 정치체제와 경제제도가 바뀌었고, 가치체계와 생활양식이 달라졌다. 누구라고 특별히 구분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모두 서구의 제도와 가치를 본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열심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해 여름까지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연속적으로 이룩한 기쁨을 자랑하면서 근대화에 성공하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성공에 대한 기대가 확신으로 바뀌면서부터 다시 새로운 혼란은 시작되고 있다. 외환시장의 위기가 촉발한 IMF의 개입은 이제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까지도 잠식하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IMF가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논리가 경제는 물론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에 침투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청을 높이고 있다. 심지어 미국을 방문한 대통령까지도 한국은 미국적 가치를 신봉하는 국가이니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연설하였다(한국일보, 1998. 6. 14. 2면).

미국적 가치의 표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유'이다. 그리고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라는 미국의 가치는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전제로 기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자유'라는 미국적 가치의 보편성을 받아들였기에 미국을 모형으로 한 근대화를 지금껏 죽기살기로 추진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근대화 그 자체만을 추진하는 일에 급급한 나머지 미국적 가치의 이면에 있는 역사의 유산과 사회적 조건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이

지 못하였다.

'개인주의'는 미국적 가치인 자유의 개념을 담아내는 또 다른 용어이다. 미국적 자유의 이면에는 개인을 국가나 사회의 개입으로부터 분리해 내는 서구의 역사가 존재하여 왔다. 중세의 교회로부터, 그리고 절대주의 시대의 국가로부터 근대의 개인은 분리되었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자유를 획득한 이후에 개인은 다시 경제적인 자유를 요구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확립한 서구의 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으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는 서구의 가족을 해체시키며 개인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해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서구의 근대화 과정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인륜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박수를 보내는 가치체계와 배타적 재산권의 행사를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가치체계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미국식 가치인 자유만을 추구하였지 그 자유의 이면에 있는 '개인의 분리'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여 왔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대소변을 못 가리고 미국을 흉내내는 일에만 급급하여 왔다. 그리고 최근 IMF라는 국난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따뜻한 인륜'과 '비정한 개인주의'는 과연 상보적인 관계로 정착될 수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두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6. '유교 자본주의'와 IMF 개입

한국은 중앙집권적인 사회구조의 유산을 강하게 물려받은 사회이다. 오백 년에 걸친 유교 왕조의 지배와 이를 이은 일본의 식민통치 및 미군정은 한국사회에 항상 분권의 경향보다는 집권의 경향을 강하게 각인하여 왔다. 해방 후의 국가건설, 군사혁명 이후의 경제발전, 그리고 6.29 이후의 민주화 모두 중앙집권화된 관료권력이 주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국가관료의 하향적 지배와 통제가 사회의 나머지 영역을 장악하는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와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중앙집권화된 지배구조는 특히 최근의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매우 두드러진 역할을 제공해 왔다. 위로부터의 계획과 집행 그리고 감시와 동원을 통해 한국의 경제는 지난 30여 년 간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왔다. 물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 범위와 정도는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이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상급자 그리고 민간기업은 하급자라는 역할분담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정부와 기업의 이러한 위계적 관계로 인해 한국은 경우에 따라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따르지 않는 개입주의 국가라는 낙인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러한 개입주의의 결과 한국의 경제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교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한국을 비롯한 유교문화권의 동아시아 국가가 서구의 '기독교 개신교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사실에 주목하는 개념이다(Lew, 1996; 1997; 유석춘 1997a, 1997b, 1998). 동아시아에서 유교와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은 서구에서 개신교가 자본주의와 결합하는 과정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서구는 중세의 지방분권적인 지배질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신교와 자본주의가 결합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중세의 중앙집권적인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유교와 자본주의가 결합하였다. 따라서 서구의 자본주의는 '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동아시아의 자본주의는 '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두 자본주의는 발생의 기원뿐만이 아니라 발전의 과정도 대조적이다. 서구에서는 귀족과 대항하며 성장하던 '부르조아' 계급이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마침내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지배계급으로 성장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노동자 계급을 포섭하였다(Gramsi, 1971).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자생력이 없는 '부르조아'를 국가관료가 경제적으로 육성하

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지도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를 이룩하였고 노동자 집단 역시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 아래에 두고 통제 및 보호하고 있다(Deyo, 1989). 또한 서구에서는 부르조아 집단의 독립적인 '경제적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자본의 축적수단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유교 자본주의에서는 지배세력과의 '정치적 유착'이 가장 중요한 자본의 축적수단이었다.

'개신교' 자본주의는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배타적 재산권'의 확립을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North & Thomas, 1973). 사적인 소유권이 없다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해 당사자간의 '거래'(Williamson, 1985)가 불확실성에 종속되어, '사회적 신뢰'(Fukuyama, 1995)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교' 자본주의에서는 배타적이고 사적인 소유권보다는 공공의 질서와 이해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정치집단 즉 집권관료의 개입과 보증이 모든 경제적 거래의 궁극적 기준이 된다(Jacobs, 1985). 비록 근대적인 법체계가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적 위기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해 당사자간의 법률에 근거한 거래보다는 도덕적인 기준에 따른 경제행위를 제3자 특히 지식인집단이 요구하고 이를 국가가 관철시키기 때문이다(Hahm, 1986).

한국이 최근의 외환위기로부터 비롯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교 자본주의'의 특징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재벌의 사재를 헌납하라는 요구나 혹은 인위적으로 기획조정실을 폐지하라는 요구, 또한 대규모 사업을 서로 교환하여 업종을 전문화하라는 요구(소위 빅딜)는 모두 여론을 등에 업은 지식인 집단의 도덕적인 요구인 동시에 정치권력의 지원을 받는 강압적 요구이다. 특히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각종 개혁정책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적인 정당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7]

물론 이를 문제삼는 여론이나 저항은 미미하다. 국민 대중의 지배적인 의견이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김영삼 정부의 초반기에 행해진 사정정국이나 5공 초기의 '국보위' 정국에서도 꼭 같이 반복되었던 일이다. IMF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유교 자본주의'는 살아 남을 것이 확실하다.

7. 재벌과 IMF 개혁

재벌의 입지가 좁아졌다. 차입경영에 의존하던 재벌이 IMF의 '고금리'라는 장애물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다. 고도성장시대 우리 재벌은 언제나 특혜의 대상이었다. 재벌은 항상 시중금리보다 낮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가능성 있는 소수의 기업을 골라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온갖 특혜는 재벌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의 차입경영 구조는 국가의 정책선택이 가져 온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우리는 마치 올림픽에 파견하는 국가대표 선수를 키우듯이 재벌을 육성해 왔다. 그리고 국민들은 재벌이 수출이라는 메달을 따 올 때마다 환호했다. 국제경쟁을 통하여 재벌이 메달을 따오는 한 우리 국민은 재벌에 대한 특혜를 문제삼지 않았다. 80년대 후반 일부 재벌이 드디어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금메달권에 진입했을 때 우리는 특혜에 의한 재벌의 성장을 성공의 모형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뿐이 아니었다. 전세계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성공을 배워야 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당시 침체하고 있던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한국을 '아시아의 다음 거인'(Amsden, 1989)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성공을 본받아야 한다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이 제안되기도 했다. 또한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던 구사회주의권 국가들도 앞다투어 한국의 성장모형을 도입하였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성공의 비밀을 설명해 주는 사절단을 보내기에 바빴

다. 성공에 취해 성공의 뒤안길에 있는 특혜의 대가를 우리는 잊어 버렸다.

그러나 당시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은 고통분담을 외치며 가시밭길의 개혁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들이 취한 개혁의 방식은 소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해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이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개혁'은 사회의 모든 부분에 경쟁을 도입하는 고통분담을 핵심으로 한다. 이 방식은 소수정예를 미리 선발하고 특혜를 통해 이들을 육성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광범위한 저변인구의 치열한 경쟁이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효율성을 배출한다는 논리이다.

산업화의 후발국가가 이러한 논리를 따를 때 과연 어느 정도나 성공할 수 있는지는 그러나 여전히 미지수이다. 역사적 경험은 오히려 '소수정예'의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불란서가 영국을 추격할 때 그리고 이 두 국가를 다시 독일이 추격할 때 선택된 방법이 '보호주의'였기 때문이다(Gerschenkron, 1962). 서구의 산업화를 동아시아가 추격할 때에 사용된 방법도 물론 '보호주의'에 의한 소수정예 전략이었다. 따라서 문제는 보호주의 혹은 소수정예에 의한 국가대표의 육성이라는 전략 자체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일은 국가대표를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관리하는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IMF의 개입을 초래한 최근 우리 경제의 문제는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재벌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소위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성공에 만족하면서 국가는 재벌의 경쟁력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 노조 또한 경쟁력의 문제는 제쳐두고 제 몫 찾기에 골몰하였다. 재벌 스스로도 경쟁력 없이 국가의 특혜가 당연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노사정' 모두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각자 생색내기에만 골몰하였던 것이다.

서구적 효율성의 기반이 되는 광범위한 풀뿌리 수준의 경쟁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 갑자기 시장의 논리를 모든 영역에 도입하자는 주장은 어쩌면 한국 경제를 완전한 진공으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 우리는 소수정예에 대한 특혜를 통해 선진 국가를 추격하여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특혜의 기준을 엄격히 하여 재벌이 특혜의 대가 즉 '경쟁력 확보'를 준비하도록 하는 일이다. 막무가내의 재벌 해체론은 한국 경제를 붕괴시킬 뿐이다. 인도네시아가 타산지석이다. 전통과현대

註

1) 이 논문은 1998년 7월 10일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개최된 한국비교사회학회 하계 학술대회 및 1998년 8월 1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정부수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지구촌 시대의 한국: 회고 50년, 전망 50년"에서 초고가 발표되었다. 전제를 허락해 준 관련단체와 연구기관에 감사한다.
2) 이건희 삼성 회장이 한 '한국정치는 4류'라는 북경에서의 발언이 이를 잘 드러낸다(조선일보, 1995. 4. 14. 9면).
3) 예를 들어 전직 고위 경제관료인 남덕우는 중앙일보와의 대담에서 당시 김영삼 정부의 산업 및 금융정책을 여러 경로를 통해 강력히 비판하였음을 밝히고 있다(중앙일보, 1996. 9. 23. 15면).
4) '금모으기운동'이나 '국산품애용운동' 혹은 '태극기달기운동' 등이 예가 된다.
5) 이와 관련해 문화일보는 1998년 8월 20일 신문 9면에 최근 아시아의 위기가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 때문이 아니라는 미국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誌의 기사를 통단으로 싣고 있다.
6) 해외에서 이 논쟁은 Foreign Affairs 및 Journal of Democracy 등의 잡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국내에서는 최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과 계간 『전통과현대』가 공동으로 1998년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안동과 경주에서 "Liberal, Social, and Confucian Democracy"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 참가한 외국학자는 Fred Alford (University of Maryland), Daniel Bell(Unoversity of Hongkong), Joseph Chan (University of HongKong), David Hall (University of Texas), Geir Helgeson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등이며 국내에서는

전병재(연세대), 함재봉(연세대), 유석춘(연세대), 강정인(서강대), 이승환(고려대), 김병국(고려대), 임혁백(고려대), 장현근(용인대), 김문식(서울대 규장각) 등이 참여하였다. 이 학술회의 결과는 곧 단행본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7) 김대중 대통령 집권 후 국회는 원구성도 못한 상태로 공전되고 있어 1998년 여름 현재까지 개혁은 법률적인 뒷받침 없이 정부의 행정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고병익, 『동아시아의 전통과 변용』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6).

김영희, "아시아적 가치논쟁의 허와 실" 〈중앙일보〉 1998년 5월 18일 5면.

유석춘, 「유교 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전통과현대』 여름호(창간호), 1997a.

-----, 「동아시아 유교자본주의 재해석: 제도주의적 시각」, 『전통과현대』 겨울호, 1997b.

-----, 「동양, 서양, 그리고 자본주의」, 『사상』 봄호, 1998.

이충훈, 「유교정치론 · 유교자본주의론 비판」, 『정치평론』4호(봄 · 여름), 한국정치학회, 1998.

한국정치연구회 엮음,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삼인, 1998).

함재봉, 『탈근대와 유교』(서울: 나남, 1998).

Alice Amsden ,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Anderson, *Lineages of the Absolute State* (London: New Left Review, 1974).

Frederic Deyo, *Beneath the Miracle: Labor Subordination in the New Asian Industrialism*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Emile Durkheim, *Suicide* (New York: the Free Press, 1951[1930]).

Francis Fukuyama, "Social Capital and the Global Economy", *Foreign Affairs* 74(5): 89~103, 1995.

Alexander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Antonio Gramsi,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Pyong-Choon Hahm, *Korean Jurisprudence Politics and Culture*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86).

David Hall & Roger Ames, *Thinking Through Confuciu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7).

Geir Helgesen, *Democracy and Authority in Korea: The Cultural Dimension in Korean Politics* (Copenhagen: Curzon, 1998).

Norman Jacobs, *The Korean Road to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5).

Charlmers Johnson,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in Robert Scalapino, et al, *Asian Economic Development: Present and Future* (Berkel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5).

Eun-Mee Kim, *Big Business, Strong State: Collusion and Conflict in South Korean Development, 1960-1990*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7).

Paul Krugman,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73(6): 62~78, 1994.

Seok-Choon Lew , "Domination Structure and Capital Accumulation in Contemporary Korea"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in New York, 1996.

-----, "Confucian Capitalism: Possibilities and Limits", *Korea Focus* 5(4): 80~82, 1997.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1944).

Wei-Ming·Tu,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Scribner's, 1958[1930])

Williamson, *The Economic Institution of Capitalism* (New York: Free Press, 1985).